

2024. 1. 10.(수)

을지로위원회 사무국 Tel 02-6788-3201·3631 / Fax 02-6788-3635
이원정 총괄팀장 010-5387-9680 / 이지환 보좌관 (우원식 의원실) 010-9254-9137

“이런 아파트에서 살 수 있나!”

<노조탄압이 건설현장 노동안전보건에 끼치는 영향> 국회토론회

2024년 1월 11일 (목) 10:00,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안전요구하는 건설노동자는 협박범

아랫부분이 깔때기처럼 생긴 호퍼에 콘크리트를 담으면 그 무게가 3톤에 달한다. 이걸 타워크레인이 인양하고 밑에 있는 타설 노동자들이 밑 부분을 잡아 움직여 콘크리트를 거푸집에 붓는다. 자칫 인양중인 호퍼가 끊어져 떨어지는 사고가 심심찮았고, 타워크레인이든 타설 노동자든 호퍼작업은 기피대상이었다. CPB라는 콘크리트 붐대 장비를 설치하면 현장은 안전해지고, 분배기 등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부실공사의 우려도 낮아졌다. 건설사도 환영했고, 전국적 대세를 이루면서, 안전 여건이 상향평준화 되고 있었다. 반면 건설현장에 CPB를 설치를 요구한 조합원은 ‘협박범’ 혐의를 받으며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휴게실 요구하고, 언론사에 제보할거면 해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건설현장엔 ‘무사고확인서’ 등이 생겨났다. 종류마다 다르긴 했지만, 위험상황을 언론사에 제보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현장 퇴출도 각오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건설사는 폭염기에 쉴 데가 마땅찮아 휴게실을 요구했던, 해당 조합원이 속한 전체 팀을 해고해 버렸다. 언론사에 해당 내용을 제보한 직후였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재 사망자 수는 감소했는가?
- 분기별·반기별·연도별 통계치가 감소세를 보이면 산업재해가 감소한 것인가?
- 통계는 들쭉날쭉하고 ‘중처법 무용론’ 및 ‘효용론’ 이 오락가락하는데 무엇이 맞는가?
- 특히 산재 사망자 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업은 어떤 상황인가?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위와 같은 물음에 답하는 국회토론회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24.01.11. (목)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건설현장 착공면적은 급감하고 있다. 2023년 9월 기준 착공면적은 5220만㎡로 2년 전 면적에 비해 40%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반면 건설업체 수는 급격히 늘었다. 지난 5년 간 2만 개 가까이 늘어 2023년 9월 기준 9만 개를 넘어섰다. 그렇다면 이들이 직·간접적으로 고용하는 건설기능인 수는 어떨까. 2019년 150만 명 정도였고, 2023년 9월 기준 152만 명으로 2만 명 정도 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2년 사이 늘어난 건설업체 수와 건설기능인 수가 같다.

착공면적, 즉 파이는 줄고 있는데, 이윤을 보아야 할 건설사가 늘었다는 것은 불법 도급으로 이윤을 남기는 페이퍼 컴퍼니가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페이퍼 컴퍼니가 도급을 거둬들수록 다단계 하도급 맨 끝에 있는 건설노동자의 노동 강도는 세지고, 노동시간은 늘고, 임금은 줄어든다. 2023년 9월 기준 착공면적 대비 사고 사망자 수는 되레 전년도보다 크게 늘었다. 착공면적 대비 사고 사망자 수를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년도였던 2021년에는 줄었다가 실제 법이 시행된 후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 벌어진 사실관계는 첫 번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주기 동안 구속 기소된 건설업 사업주는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윤석열 정권 차원의 건설노조 탄압이 자행된 1년 동안 37명의 건설노동자가 구속됐다는 것이다. 사고 사망 통계치로는 건설현장의 안전 수준을 가늠하기 어렵고, 건설현장은 안전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위험해졌다고 볼 수 있다.

건설노조 조합원 중 경찰조사를 받은 노동자는 2천 명이 넘었다. 이들 중 411명이 2023년 5~9월 진행한 설문에 참여했고, 31.8%(131명)가 자살 또는 자해를 생각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번 국회토론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노조 공안탄압과 국가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위기 실태조사 / 발제자 두리공감 장경희 상임활동가)

2023년 10월 안전신문고·국민신문고에서 잇따라 건설노동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영등포경찰서는 ‘안전신문고 민원인 전수조사에 따른 경찰조사’ 문자메시지를 건설노동자에게 보냈다. 노동조합은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한 바 있다. 이어 국민신문고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로 건설사가 민원인에게 불편한 심경을 전화통화로 전하는 사건도 있었다. 노동조합은 이 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관련 재판을 제기한 상태다.

이와 관련하여 일과사람 손익찬 변호사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단순히 범죄임을 넘어서 헌법상 기본권인 청원권 침해이고, 사회적 맥락을 짚어보자면 정부가 진실을 외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채 건설자본의 편을 드는 것이며, 건설노조 탄압과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는 내용의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조탄압의 여파로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경시하고 불온시 하면서 노동자 스스로 일이 힘들거나 노동시간이 늘어도, 임금이 깎여도 참으며 일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지난 1월 8일부터 이틀간 건설노동자를 대상으로 이와 관련한 설문을 진행했다. 당시 설문을 통해 구성한 건설노동자 ‘김씨’ 이야기로 건설현장 실태를 짚음하고자 한다.

건설노동자 ‘김씨’ 이야기

20년 경력(26.4%)의 50대(47.6%) 숙련공 건설노동자 ‘김씨’는 1년 전부터 스트레스, 우울감이 높고(69.9%) 온 몸 여기저기가 쭈시는 등 신체적 피로도가 상당하다.(70.2%). 건설현장 관리자들로부터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은 나가라’는 소리를 듣게 되면서부터다.(53.5%)

아이러니 한 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 되었는데, 건설노동자는 안전발판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거나 해서 작업 중지를 할 수조차 없다.(34%) 노조탄압 여파로(22.6%) 건설사 눈치가 보이기(34%)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선 위험성 평가를 강조하는데, 건설사는 통보만 할 뿐 TBM을 하면서 노동자 의견은 묻지 않는다.(55.9%)

‘김씨’는 디엘이앤씨 같은 굴지의 재벌건설사 현장에서 7건의 중대재해로 8명의 건설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지만, 무력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업주가 기소 및 처벌받지 않았던 게(31.2%)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HDC 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현장 붕괴참사 후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가 불법도급을 근본적 원인으로 꼽았는데, 이 불법도급이 참사 전과 다를 것이 없거나(49.1%) 오히려 더 심해졌다는 점이다.(28.1%)

결론적으로 윤석열 정권 이후 건축물은 매우 부실(27.3%)하거나 부실(34%)해졌다. 현 정권이 들어서고 건설현장은 100% 불법도급(36.7%)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이 때문에 건설노동자가 현장에서 겪는 노동 강도는 더 세졌다.(63.7%) 노조탄압 이후 안전사고 발생 정도가 높아졌고,(79.7%) 노동안전보건 상태는 더 위험해졌다.(56.4%)

무엇보다 ‘김씨’ 같은 숙련공이 일할 데가 마땅찮고 고용이 매우 불안(71.6%)하다. 튼튼한 건축물을 지으려면 숙련공이 70% 정도는 투입돼야(62.9%) 하는데, 아파트 지상구간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 나머지 노동자 비율]이 10:0(16.9%)에 달하는 곳도 있다. 건설현장에선 베테랑 숙련공보단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선호한다. 윤석열 정권 이후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매우 늘었다.(60.9%)

‘김씨’ 같은 숙련공은 일자리를 찾을 수 없고, 건설사는 저임금으로 쉬는 시간 없이 10시간 이상 ‘일할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올해는 2023년에 비해 건설경기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는 2024년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막막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주년 구속기소된 건설사업주 0명
건설노조 탄압 1주년 구속 노동자 37명

“이런 아파트에서 살 수 있나”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사라지자 ‘난장판’ 된 건설현장

노조탄압이 건설현장 노동안전보건에 끼치는 영향

국회토론회

2024. 1. 11.(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

프로그램

현장 증언 | 안전 요구했더니 경찰조사 | 현장 노동자
휴게실 요구했더니 해고 | 현장 노동자

발제 |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찰소환조사 대상자 심리적 위기 실태조사 결과 | 심리치유단체 두리공방
안전신문고, 국민신문고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점과 그 영향 | 일과사람 손익찬 변호사

토론 | 민주노총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노동안전보건 시민단체

주최 |  민주노총 건설노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